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336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5. 19.

발 의 자 : 김재경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 대상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게 할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합의

다. 합 의 :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라. 기 타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2. “가족등”이란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한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로인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의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련 대학 교수
3. 재해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로운시민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위촉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정신청 등)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통보 등) 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의로운 시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7조(위로금의 지급)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8조(예우 등) ①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대전광역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대전광역시사 등 향토지에 공적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②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랑스런 대전인상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환수) ①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찬성의원서명

[illegible]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5.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 5.19 김재경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08. 5.19

다. 상 정 일 자 :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5. 23)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경의원)

1. 제안이유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 대상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과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6조).
- 마.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할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조례안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회의·수
당 지급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6월이내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및
3월이내 결정·통보, 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규정을,
- 안 제7조는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 안 제8조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추모비 건립 포상 등
예우에 관한 규정을,
- 안 제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위로금의 환수 규정을,

-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구·광역시의 의사상자 신청 청구를 받아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영전의 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으나,
-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별도로 대전시 차원에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지는 만큼,

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부상이나 재산적 피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의사상자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의 적절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